

농촌 생활돌봄 서비스 정책화 논의

전북도, 전문 직위 대폭 정비

전북연구원 · 한국농촌사회학회, 공동세미나 · ‘공동의 연구활동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북연구원과 한국농촌사회학회가 농촌지역의 다양한 미충족 생활돌봄을 위해 ‘농촌생활 돌봄’ 방안에 대한 공동세미나를 29일 개최했다.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농촌사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진이 함께하는 농촌 공동체 돌봄, 농촌지역 생활돌봄 청년 일자리 정책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미충족 돌봄’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여러 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생활돌봄’은 농촌주인이 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하는 생활서비스로 장보기, 말벗, 이동지원 등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남훈 박사는 “농촌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주목, 주인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줄이고 효과를 늘리는 최적 방안으로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공동체 돌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이 고령자인 농촌지역에서 노인돌봄을 주제로 농촌주인이 주체가 돼 돌봄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전북연구원과 한국농촌사회학회는 29일 농촌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학술적·정책적 영역에서 ‘공동의 연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돌봄을 직접 기획하며, 시설 운영 등을 맡는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황영모 박사는 “(공적부조)수급자 돌봄 서비스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신체적 한계로 충족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생활돌봄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촌지역의 생활돌봄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해 다양한 미충족 생활돌봄을 담당할 활동 주체(조직)가 활동 인력으로 (귀농·귀촌) 청년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활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농촌 생활돌봄은 농촌사회의 역량이므로 서비스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역량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효진 안주소셜굿센터 센터장은 “농촌사회의 핵심은 공동체의 유지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적농업 등의 방식이 지역사회의 관계를 확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지역사회 돌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농촌사회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필요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생활돌봄’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계를 볼 때, 다양한 미충족 돌봄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동세미나에 앞서 전북연구원과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촌사회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학술적·정책적 영역에서 ‘공동의 연구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촌사회학회 김흥주 회장(원광대 교수)은 “양 기관이 힘을 모아 농촌사회의 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학술활동과 정책연구를 통해 농촌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성 평등 포럼 온라인 개최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소장 이수인)는 29일 ‘코로나19와 젠더위기: 여성노동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제2차 성 평등 포럼을 온라인 비대면(ZOOM)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취약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및 개인서비스업에서의 코로나의 악영향에 대해 진단하고, 돌봄노동의 중심에 선 여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질적 개선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발제내용에 대해 토론자들은 재난시기에 특히, 여성노동에 대한 부당한 요구나 조치, 강요 등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정부의 대책, 지침을 이끌어 내는데 사회적 관심과 협력의 필요성, 피해자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호상 기자

재해복구 사업장 현장 점검

최훈 행정부지사, 완주·진안 찾아 현황 점검·시·군 격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9일 지난해 제방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 성북천’과 ‘진안군 진안천’ 등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시·군을 격려했다.

‘성북천’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 제방 등이 유실돼 4.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아 총사업비 14.7억 원을 투입, 28개 공구 2,075m의 제방 및 호안 등 복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을 50%이며, 올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진안천”은 진안군 진안을 소재지를 가로지르는 도심권 하천으로, 지난해 폭우로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국비 12.6억 전액을 지원받아 12개 공구 811m에 제방 및 호안 복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70%의 공정률로 올해 8월 완료할 계획이다.

최훈 부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며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와 아픔이 없도록 비상대책반을 가동,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구간을 보강하고, 수방자재를 비치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재해복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로 1,21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2,054건에 대해 총 사업비 4,231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1,704건(83%)을 완료했고, 6월말 우기 전까지 1,882건(92%)이 준공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기존 52개 전문 직위 중 37개 전문 직위 최종 지정

전북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 전문 직위를 일제 재정비했다.

도는 실무부서와 인사부서의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 당초 52개로 운영되던 전문 직위를 37개로 대폭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무 중요도와 적합도가 낮은 18개 직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34.6%)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34개 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존대로 유지(65.4%)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전문 직위 등 중요도가 높은 3개 직위를 신규 지정하며, 총 37개의 직위에 대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정비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과 3단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을 거치며, 부서의 무분별한 직위 지정을 방지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직위 지장의 공정성과 직위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했다.

유희숙 도 자치행정국장은 “디지털 및 비대면 시대의 도래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문 직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정비된 총 37개 전문직위 중 27명이 전문관 보직을 받아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 지정 등 미선발 10개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공모 선발해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 추진

전북도가 진안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를 추진한다.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는 지난 2005년 전북도와 진안군, 수지원공사, 지역주민과 체결한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며, 올해로 8번째 평가다.

평가 대상은 진안군 외에 장수군과 무주군, 수지원공사, 농어촌공사이며, 5개 기관에서 2개년(2019~2020) 동안 추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점·비점 오염 저감 정책, 지역주민 수질자율관리 확산 운동 등 5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평가 지표 중 국비와 지방비,

기금 확보액의 경우 기존 단년도에서 평가 기간 2개년을 모두 합산해 전(前) 평가 기간 2개년과 비교한 증가율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기관에서는 평가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6월까지 수질·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포함 1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9월까지 1차 서면평가, 10월에 현장확인을 통해 최종 평가를 한다.

도는 이번 수질 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등급이 보통일 경우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미흡으로 나오면 현재의 수질 자율관리 체계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 7개 민간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협력

전북도가 29일 전북하나센터에서 전주병원, 법무법인 운유 등 7개 민간기관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 강화를 돕고자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의료, 법률 자문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알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북도 최환 자치행정국장, 전주병원 김중준 의료원장, 익산병원 신대희 팀장, 법무법인 운유 신홍섭 변호사,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이수홍 회장, 전북하나센터 조미영 센터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익산병원은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의 의료 상담 및 건강검진서비스 등 의료 혜택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운유는 탈북민 대상 법률 교육 및 자문을 담당하며, 전주시 사회적기업협의회는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우선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